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2면
한국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2면

기시다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3면
일본인 사회주의자의
기시다 비판 3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내 온 편지
5면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에 대해
6면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7면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8~10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원, 전액 구제하라

관련 기사 4, 5면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4.14)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미국 은행 위기 확산 중

강동훈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잠잠해지던 미국의 은행 위기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자산 순위 14위) 파산으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을 전격 인수했지만, 또 다른 지역·중소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 인수 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혼란은 끝났다” 하고 공언했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퍼스트리퍼블릭 매각 다음날인 5월 2일에도 미국 지역 은행 여러 곳의 주가가 급락했고, 다음 파산 대상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은행들이 위기를 겪는 것은 저금리 시기에 사들인 채권 등 보유 자산의 가격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보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자 예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5월 3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으로 금융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는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10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5.25퍼센트로 올랐다.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 수준 금리다.

연준 의장인 파월은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고,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지금껏 경제에 풀린 돈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친기업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 물가 상승이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이윤을 늘린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알렉스 캘리니코

스의 지적처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이고 임금을 억제해 이윤을 지키려 “가차없는 계급 정치를 실천한 것”이다.(본지 453호, 2023년 3월 25일자)

그러나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는다는 전략은 미국 은행권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아미트 세루 교수는 미국의 은행 4800곳 중 절반 정도가 이미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라고 추산했다. 세루 교수에 따르면, 미국 지역 은행들뿐 아니라 대형 은행도 매우 취약해졌다. 현재 가장 취약한 은행 10곳 중 4곳이 대형

은행이라고 한다.

또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도 은행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 연준의 조사를 보면, 올 들어 미국 지역 은행에서 이탈한 예금은 2627억 달러(약 352조 원)에 이른다.

게다가 고금리의 여파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지역 은행들의 부실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19퍼센트를 기록했다. 31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대형 투자기관들조차 최근 사무실 담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파산해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최고치 대비 40퍼센트 정도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70퍼센트가량(2조 3000억 달러)을 미국 중소 은행들이 해 줬다. 높은 금리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강제 매각되거나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 준 중소 은행이 부실화해 다시 예금이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빌려 준 돈 떼이는 일이 늘고 있는 한국 금융권

최근 국내에서는 부유층의 돈을 모아 주가 조작을 하던 세력이 작전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이 작전 세력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대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따라서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이득을 취하려다 작전이 실패하며 큰 손실을 본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 대주주들도 관여된 듯한 정황이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금융 사기 사태는 자산 시장 거품 시기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고, 이런 사기는 금융권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십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된 투자

자들이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그 빚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돼 증권사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추가로 손실을 보게 생긴 것이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이미 10퍼센트를 넘어섰고, 카드·저축은행·대부업 등 제2금융권 전체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주요 은행들도 회수하지 못하는 원리금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 3월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이 3조 82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이하여신

은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은 부실 채권으로 사실상 떼인 돈으로 간주된다. 특히 농협은행은 고정이하여신이 866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2퍼센트나 증가했다. 부실 채권이 될 공산이 큰 ‘요주의여신’도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에서 6조 4203억 원을 기록해, 2018년 3분기 이후 최대로 집계됐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경기가 하강하면서 한계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여력이 떨어진 탓일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4월 무역수지도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무역수

지 적자도 14개월째 계속됐다. 미국의 5월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퍼센트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의 금융 불안정이 확대되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 나가며 외환위기가 터질 공산도 커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전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고장 난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은 노동자 등 서민층에 떠넘기려는 공세를 벌일 것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층 고통은 외면하고, 부자 감세와 긴축 정책으로 위기의 대가를 보통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

한일 군사 협력, 역대급 군비 증액, 핵 오염수 ...

일본 총리 기시다의 방한을 다수 한국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5월 7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한국에 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파와 공분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을 앞두고 한일 정부 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그의 방한 목적이다.

이 결속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한 윤석열의 “외교적 결단과 정치적 용기”를 거듭 칭찬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어받아, 북핵 대응을 고리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협력 강화 방향을 재확인할 것이다.

윤석열과 바이든이 만들기로 한 핵협의그룹(NCG)에 향후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무기와 연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에 따르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해진다.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G7 국가인 독일이 이를 공개 비판하는 등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난 3월 방일 때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교도통신> 보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답변을 준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군사대국화

기시다의 집권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전 총리 아베 노선의 계승을 표방하며 군사대국화를 막는 족쇄를 빠르게 깨뜨리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위기 등으로 세계적 불안정이 고조된 것이 큰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시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군비를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놔다. ‘평화헌법’(헌법 9조) 정신에 따라 군비를 GDP(국내총



급속도로 군비 늘리며 미국과 손잡고 세계를 위협하게 만드는 기시다

생산)의 1퍼센트로 제한한 기초를 완전히 깨뜨린 것이다.

그리고 군비를 대폭 늘리기 위해 담뱃세 등 증세 계획을 내놓고 노인 의료 복지를 삭감하는 등 서민층 공격에도 적극 나서 왔다.

기시다의 군비 증액과 함께, 적국의 군사 거점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했다고 천명했다. ‘반격 능력’은 실제로는 선제 공격 능력을 뜻한다. 이는 평화헌법 정신에 따른 기존의 ‘전수방어’(오로지 방어만 한다) 전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의 60년

넘은 숙원을 기시다가 정책 명시 수준까지 강행해 낸 것이다.

기시다의 또한 국제 분쟁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수정해, 우크라이나에 방탄복과 헬멧 등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이 군사 장비 지원이 평화헌법을 벗어던지는 과정에서 “결정적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기시다의 더 나아가 살상 무기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침을 더 수정하려 하고 있다.

기시다의 군사력 강화에 번번이 장애

물이 되는 헌법을 아예 개정해 버리려고 한다. 2024년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거듭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제국주의적 진출 심화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깊이 맞물려, 인도·태평양 지역을 매우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 이 지역 영토 분쟁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제국주의적 갈등 고조 때문에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위협한 뇌관들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기시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 강한 일본, 더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좋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것이 대만해협에서도 지속되고 남·동중국해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윤석열이 미국·일본 정상과 만나서 맺는 안보 합의들은 세계의 군사적 불안정을 키우고, 한국을 그 속으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갈 내용임은 불 보듯 뻔하다.

윤석열과 기시다가 만나 논의할 내용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평범한 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김승주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일본 대중은 기시다에게 불만이 크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정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한·일 관계 개선’ 등에 대한 기대로 잠깐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서 일본 시민들이 기시다에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액을 결정한 데 대해 분노와 불만을 품고 있는 시민이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 일본 정부가 사회보장을 위한 자원 확보를 구실로 소비세 인상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장성을 확대하기는커녕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삶을 희생시키

고, 군비 증액과 공세적 군사 전략으로 원치 않는 긴장을 고조시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주요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됐지만 기존 핵발전소를 수리하고 최대 운전 기간을 60년 이상으로 늘리려는 계획이나, 최근 발표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이 반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41퍼센트에 달했으며, 심지어 후쿠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후쿠시마민보>)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았다.

이처럼 기시다나 윤석열을 비롯한

지배계급이 전개하는 제국주의적 정책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한다.

나는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고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한다. 최근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이를 폭로하는 주장과 시위, 서명 운동 등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럴 때일수록 노동계급이 단결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계급이 연대하여 함께 국제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하세가와 시오리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청년. 한·일 통번역사

“전세 사기와 강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전세 사기·강통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오피스 카톡방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큰 강통전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올해 만기인 빌라 10만 채 중 6만 채가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강통전세일 공산이 크다. 인천 75.4퍼센트, 경기 64.6퍼센트, 서울 61.1퍼센트에 이른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크게 불거진 서울 강서구는 85퍼센트, 인천 미추홀구는 73퍼센트가 강통전세일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아무리 꼼꼼히 따져서 집을 구했다 한들 강통전세의 위험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말이지 전세 사기·강통전세 문제는 세입자들의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 사기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도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최근 미추홀구에서 세 명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부랴부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안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밀며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안이다.(관련 기사 본지 458호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까다로운 조건에다 보증금 보상도 없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보증금 기준에서 1500만 원 높다는 이유로, 저는 평생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를 지옥 같은 집에서 삶의 희망도 없이 높은 금리와 대출 상환의 압박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9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5월 3일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 규탄 행진에 참가한 한 피해자)

정부가 전세 보증금 4억 5000만 원, 피해자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전세 사기와 강통전세를 구별해, 사기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강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갈라치는 특별법 반대한다 5월 3일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 규탄 행진

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사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다. 결국 이런 기준은 대다수 피해자들을 내팽개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집단 피해냐 아니냐를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도 불합리하다.

책임 회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지원 대상이 돼도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돈을 빌려줄 테니 피해자들이 경매를 받아 집을 사라고 한다. 이러저런 이유로 경매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집을 LH가 공공임대로 매입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LH가 공공임대로 매입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기존의 전세 자금 대출은 전혀 탕감해 주지 않고, 3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하게 해 주겠다고 한다. 폐인 전세 보증금을 평생 갚으며 살라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개인 간 채무 해결”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 회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전세 대출

제도, 전세보증보험제도 다 도입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갭투기꾼’으로 변질돼 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뭐 했습니까?”(이철빈, 5월 3일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 규탄 행진에 참가한 피해자)

“누가 부동산을 사람이 살아야 할 집이 아니라 다주택자와 사기꾼의 바다로 만들었습니까? 시장에 복무해 무분별한 대출 완화와 부동산 부양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 아닙니까? 이에 발맞춰 은행들은 대출 장사를 했고, 다주택자와 사기꾼들이 판을 펼친 것 아닙니까?”(집걱정없는 세상연대 활동가 강지현, 5월 1일 피해자 발언대회)

윤석열 정부도 “다주택자들 세금 깎아 주는 게 세입자들을 위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만 온 힘을 쏟고, 막상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해 왔다.

원희룡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고, 할 계획도 많습니다. 여러 건설 기업들의 부실 채권, 캠프에서 모두 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1조 원 정도 매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7년까지

지 4조 원을 만들어서 부실 채권을 구입하는 데 쓰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데, 개인들이 쓰러지는 위기에서는 왜 이렇게 집단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까?”(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5월 1일 피해자 발언대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우선하며 기업과 은행의 부실 채권을 해결해 주는 데만 힘쓰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이 경제 위기의 피해를 입는 것은 나 몰라라 하면서 말이다.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된 서민들의 안타까운 일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런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전세 사기·강통전세 피해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혈세 낭비 운운하며 서민들의 피해에 세금을 쓸 수 없다고 나오지만, 정부의 세금은 시장과 기업주들이 아니라 노동자 등 서민층을 삶을 살리기 위해 써야 한다.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관련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구제해 주고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라고 제안해 왔다(선 구제, 후 구상).

그런데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자신들의 방안이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전세가 개인적 거래라는 관점을 공유하며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적어도 전세금의 50퍼센트는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라도 보전해 주자는 안을 냈다. 그런데 최근 정의당은 선 구제, 후 구상 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대상을 확대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는 전세금을 한 톨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전세금 50퍼센트 보전안 보다는 후퇴한 방안이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등과의 협상에 치중하다 보면 후퇴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거리 운동이 커져야 한다.

정선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서지애 전세 사기 피해자

지금도 전세 사기가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실명을 밝힙니다.

나는 2020년,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 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개인이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다.

나는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이 임대사업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악성 임대인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됐다. 얼마 후 또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이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다. 근저당이 내가 사는 집을 포함해 주택 다섯 채에 걸려 있다는 것은 근저당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알게 됐다.

이 집에 살고 있는 건 나인데, 이 집에 걸린 어마무시한 사건들을 알게 된 건 우연적이거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였다. 이후 불안한 마음에 강박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떼어 봤다. 볼 때마다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다. 근저당에 묶인 다른 세입자들을 찾아다녔고,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이런저런 대응 방법을 알아봤다. 그러나 해결은 멀어져만 갔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책만 늘어놓았다. 하나같이 '머리에 총맞은 사람 아니면 그런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로 피해자인 나를 질책했다. 합법적인 투기였고 그런 투기를 눈치채지 못한 세입자가 문제라는 식이었다. 이 집의 매매 사실도, 임대인의 체납 세금도, 근저당 채권도 전혀 알 수 없는, 정보 접근 권한이 전혀 없는 세입자가 어떻게 하면 눈치 챌 수 있었을까? '관심법'이라도 배워야 하나 싶을 정도였다.

전 재산에 대출까지 끼고 들어온 집인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자책감이 상당했다. 이 집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지옥에 사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2년 계약기간이 끝났다.

빌라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는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그를 대리한다는 컨설팅 부동산은 재주 좋게도 이 집의 감정가를 올리고 명의를 돌려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허황된 말로 자신의 잘못을 비켜 가려 했다.

그러나 근저당뿐 아니라, 세금 압류까지 들어온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자 은행에서는 이런 불안정한 집의 전세 대출을 연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는 다른 가게 대출로 갈아타야 했고, 금리가 공공행진하던 시기라 대출 이자는 늘어났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결과가 너무나 빠른 재판이지만 6개월이 넘게 걸렸다. 지금은 또 강제경매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것도 1년 가까이 걸릴 것이다. 재판 비용만 해도 이미 수백만 원이다. 이 집에 산다는 죄로 나는 은행, 법조계, 부동산 중개업계 모두의 먹잇감이 돼 있었다.

먹잇감

특히 내가 가장 분노하는 대목은 이런 악성 임대인이 빌라 수백 채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까지 정부가 뒷받침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고,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퍼부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어 갭투자가 횡행했다.

그런 과정에서 땀! 터진 것이 바로 지금의 전세 사기이다. 물론 전세 사기라는 말도 몇몇 악성 임대인이 집 수백 채를 나 몰라라 하면서, 또는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사회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세 사기는 주택을 시장의 수요 공급에 내맡기면서 투기를 불러오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실제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현재 주택 경기가 악화되면서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강통전세도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



사진 출처: 참여연대

전세 사기는 주택을 투기판으로 만든 정부의 시장주의적 주택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다. 경·공매까지 가서야, 임차인이 대항력도 갖추어야,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지역 여건에 따라 4.5억 원까지), 수사가 개시되고 전세 사기 의심 대상이 되며,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에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기 의도를 입증해야만 한다니, 말이 되는가? 정부는 지금도 미추홀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한꺼번에 일어난 일부 지역만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여러 세입자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나만 보더라도 임대인이 근저당을 잡은 집 다섯 채는 다 흩어져 있고, 주거 형태나 가격도 다양했다. 더구나 한 임대인에게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1~2명만 있다면 그건 사기의 의도가 없는 것이고, 세입자는 피해자가 아닌가?

그나마 이토록 까다롭게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정책조차도 전세 보증금을 보상해 주는 지원이 아니다. '주거 안정'이란 말로 포장해 LH가 주택을 매입해 살게만 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로 개인 사기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대중을 갈라치기하려는 수작이다.

미분양 아파트로 인한 건설사들의 이윤 손실에는 혈세를 적적 쓰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전세 사기, 강통전세 피해자들에게는 한 톨이 아깝다니... 서민들을 대하는 이 정부의 민낯과 그들의 우선순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분명히 말하지만 전세 사기, 강통전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 이 재난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주의적인 주택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정부를 비판하며 대안을 내놓은 야당 법안들은 정부의 안보다는 나으냐, 제대로 된 대책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선순위인 경우 '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구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세 가격보다 집 가격이 하락하는 역전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의 시세가만큼만 구제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선순위일지라도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빚만 남게 될 것이다. 선순위가 아닌 경우 보증금의 50퍼센트만 보상해 주는 방안도 피해자들이 너무나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전세 사기, 강통전세의 피해자들은 야당 의원들의 법안에만 기대어서는 안 된다. 날아간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온전히 보상하라고 분명히 요구하며 운동을 더 크게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에 대해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에 맞서는 “투쟁의 힘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지긋지긋한 기득권 양당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우리가 나섭시다. 단결을 위해 차이를 극복합시다. 8월까지 치열한 토론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 직접 정치, 광장 정치를 실현해 나갑시다.”

민주노총 상임 집행부의 ‘노동 중심 진보대연합 정당’ 창당 안을 재차 제안한 것이다.

좌파 정당들이 “각개약진(분열) 방식”으로 선거 대응하는 것으로는 대안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길에서 희망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 정당만 지지할 수도 없으니 연합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존 좌파 정당들이 선거(그리고 의회) 면에서나 투쟁 면에서나 그다지 충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안에서 진보연합당 창당을 추진하는 세력은 진보당계 간부들이다. 연합 대상으로 거론된 4당(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중 진보당만이 창당 안에 찬성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진보연합당 창당론은 진보당계가 노동조합 안에서 지금보다 기반을 더 확장한 정당을 만들려는 프로젝트이다. 즉, 민주노총의 상근간부층과 공식적이고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정당이다.

진보당계가 민주노총 의결 기구에서 이 안을 다수결로 관철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새 정당의 힘(세력)과 관련된 듯하다. 이 당이 안정되게 출범하려면 민주노총 상근간부층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상근간부층 내에선 좌파 정당들의 정치적 분화가 민주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 노동자 운동에 필요한 것은 계급 투쟁에 진심이고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만만찮다. “[복수 정당들로의] 분열과 경쟁에 대한 냉소, 혐오, 패배주의와 무기력감의 확산으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자 민주노동당 초대 당대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등이 진보연합당 안에 찬성하고 있다.

좌파 정당들의 득표력이 꽤 있는 울산과 창원 등 영남 노동벨트의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류가 읽힌다.

좌파적 개혁주의

지금 좌파 정당들의 취약함과 비교하면, 민주노총이 뒷받침하고 진보당계가 주도하는 진보연합당은 좌파적 지향성 면에서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다.

진보당은 다른 정당들, 특히 정의당과 비교해 택배노조 · 건설노조 등 노조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고, 미국 제국주의와 윤석열 정부의 친미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정의당보다 비판적이다.

진보연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존 진보정당들을 의회주의, 대리주의라고 비판하고 “직접 정치”와 “광장 정치”를 주장한다.

그러나 진보연합당이 표방하는 노동 중심성은 현장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노동조합(민주노총) 상근간부층 중심성이다.

노사 간 협상과 중재를 전담하는 노조 상근간부층은 실천에서 투쟁의 자기제한성을 드러낸다. 이들에 기반한 정당은 체제 내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정당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자기제한성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동반 상승효과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조장하는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상대적 분리를 받아들이며 더 심화된다.

실천에서 이런 정치는 결국 선거에서 이기고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문제로 한정된다.

진보연합당이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으로 제안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이 정당의 “직접 정치”는 노조 상근간부층 출신자들이 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뜻하기 십상이다.

물론 노조 상근간부층이 현장 노동자들과 맺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런 정당은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진지하게 노동을 향하지 않았던(최근에 그 방향을 조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정의당보다 조직 노동계급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층의 개혁주의적 성격 때문에 진보연합 정당은 좌파적이지만 결국은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는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개혁을 성취할 여지가 적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선거적 성공을 거두는 즉시 그 정당의 좌파성도 스스로 제약할 공산이 있다.

경험 그리고 달라진 맥락

이런 정당을 노동자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2000년대 민주노동당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기반해 창당했고 강령에서 스탈린주의와 주류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극복하겠다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하지만 주요 계기마다 개혁주의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것은 진일보였다. 독자적 노동자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민주노동당을 이미 경험했고, 10년 넘도록 복수 좌파 정당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새 진보연합당이 창당된다면 그것은 기존 좌파 정치 지형에 조금은 더 좌파적인 개혁주의 정당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연합당의 창당을 이력저력 반길 만하지만 그 정당의 창당에 큰 기대감을 갖기도 어렵다. 촛불 운동 성공 이래 지난 6년 간의 경험과 최근의 경제와 제국주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지금 노동자 운동에 필요한 것은 계급 투쟁(계급 타협이 아니라)에 진심이고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수백만 명이 시위로 투쟁 지속 의지를 밝히다

지금은 연금 공격에 맞선 싸움을 끝낼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싸움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노동절인 5월 1일에 13번째 전국 행동의 날이 열려, 약 300개의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법에 반대해 거리로 나왔다.

법의 공식 절차가 모두 끝났는데도 노조 지도자들은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행진했다고 밝혔다.

파리에는 55만 명이 행진했는데, 이는 2022년 같은 날 열린 시위의 10배이고 지난 전국 행동의 날인 4월 13일보다 15만 명 더 많은 규모였다.

기층에서 운동이 전혀 소진되지 않았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하나의 신호다.

마르세유에서 약 13만 명, 툴루즈에서 10만 명, 보르도에서 10만 명, 낭트에서 8만 명, 그르노블에서 3만 8000명, 브레스트에서 3만 3000명, 바욘에서 3만 명, 클레르몽페랑에서 2만 5000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어디에서나 경찰은 시위대에게 최루가스를 퍼부으며 특히 잔인하게 굴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지배자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노동계급과 반(反)인종차별

5월 1일에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도 열렸다. 이들은 마린 르펜의 파시스트 국민연합(RN)이 르아브르에서 개최한 연회에 반대하려고 거리로 나선 것이었다.

국민연합이 최근의 노동자 운동에서 가장 전투적이었던 르아브르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도발이었다. 수천 명이 모여 파시스트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다. 행진에 나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르펜을 추방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을 풀어줘라.”

마티외는 <소셜리스트 워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르아브르에서 7000명 규모의 노조 행진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1000명의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대오가 따랐고 인종차별 반



메이테이에 230만 명이 행진했다. 그러나 다음 전국 행동 예정일인 6월 6일은 너무 늦고, 또 제한적이다

대 단체 ‘연대의 행진’이 그 선두에 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50명을 포함해 파리에서 온 100명이 행진했다.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환대를 보냈고, 반파시즘 축제로 콘서트와 연설이 열렸다.”

이 시위는 과거 여러 좌파와 노동조합들이 파시스트에 대해 행동에 나서기를 거부했던 것에 비하면 한 걸음 진보한 것이다. 시위대 일부는 국민연합의 행사 장소(경찰이 비호했다)로 곧장 행진했다.

노동총동맹(CGT) 산하의 토탈에너지 노조 대의원 티에리 드프레느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는 노동계급과 반(反)인종차별의 문화가 있다. 우리는 국민연합은 여기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려고 모였다. 그들은 노동자의 최악의 적이다.”

앞서 지난 4월 29일엔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렸다. 그 시위는 새로운 이주민 배척법과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 마요트에서 이주민 추방 공격에 반대했다. 파리, 마르세유, 렌, 그르노블 등 9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다.

5월 2일, 노조 지도자들은 연금 공격에 맞선 다음 행동을 결정하려고 만났

다. 그들은 6주 뒤인 6월 6일에 또 다른 전국 행동의 날을 열기로 했다.

그 무렵 의회에 연금 공격을 무효화할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지지하면 된다는 막연한 바람에 기초한 결정이다. 너무 늦고, 마크롱에 대한 압력도 키우지 못한다.

6월 6일?

사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이제 대규모 파업, 항의, 시위의 시기는 끝났다고 믿고 있다. 가장 큰 연맹인 프랑스 민주노동자총연맹(CFDT) 지도자 로랑 베르제가 투항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CGT의 지도자 소피 비네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단결된 노동절은 없었고, 이토록 고독했던 공화국의 대통령은 없었다. 그 둘 사이의 대조는 극명하다.” 그러나 비네는 CGT가 5월 1일 이후 신속한 후속 집회를 잡지 않고 [6월까지] 후퇴한 것을 두고는 베르제가 망설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지난 2주 동안 “냄비 시위대”(냄비를 두드리는 등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이용한 시위)는 정부 장관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다. 장관들은 종종 일

정을 취소해야만 했다.

노조가 저항 투쟁의 진정한 초점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게릴라”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5월 1일, ‘멸종반란’은 세계 최대 부호 베르나르 아르노가 소유한 루이비통 그룹의 본사에 스프레이 페인트칠을 했다. 직접 행동 환경 운동 단체 ‘최후의 혁신’은 리츠 호텔과 법무부에 스프레이를 뿌렸다.

같은 날 마르세유에서는 약 200명이 호화로운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일시 점거했다. 시위대는 호텔 정면에 “오늘의 메뉴: 부르주아지”는 글귀를 그렸다.

그런 행동은 파업의 위력을 키울 수 있고, 공식적인 행진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운동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마크롱에 대한 분노, 노동자에 대한 공격, 민주주의 침해, 경찰 폭력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 분노를 짓밟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아래로부터 저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찰리 김버 / 번역 박이랑

출처 Charlie Kimber, 'Protests show millions want to keep fighting in France'(2023. 5. 2)

폭주하는 윤석열 외교, 핵심 문제는?

김영익

이 글은 5월 3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
회(QR 코드로 영상 보기)
의 발제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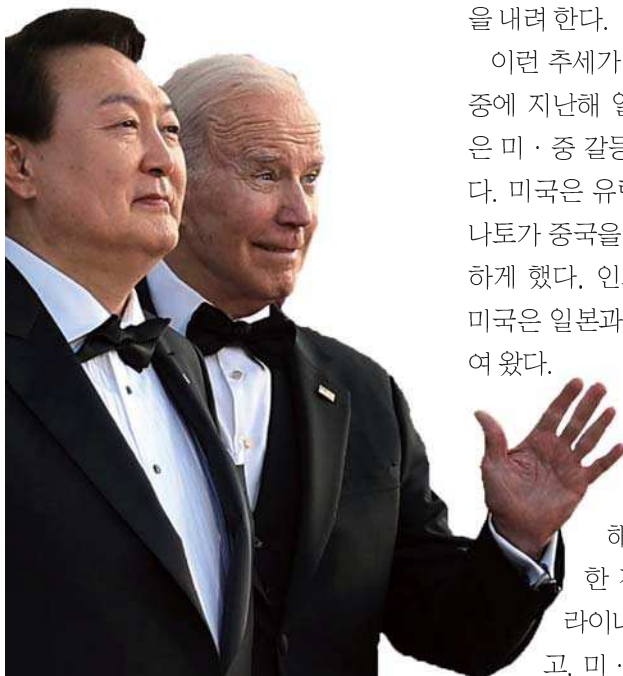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동북아시아를 뛰어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등 폭넓은 문제들을 놓고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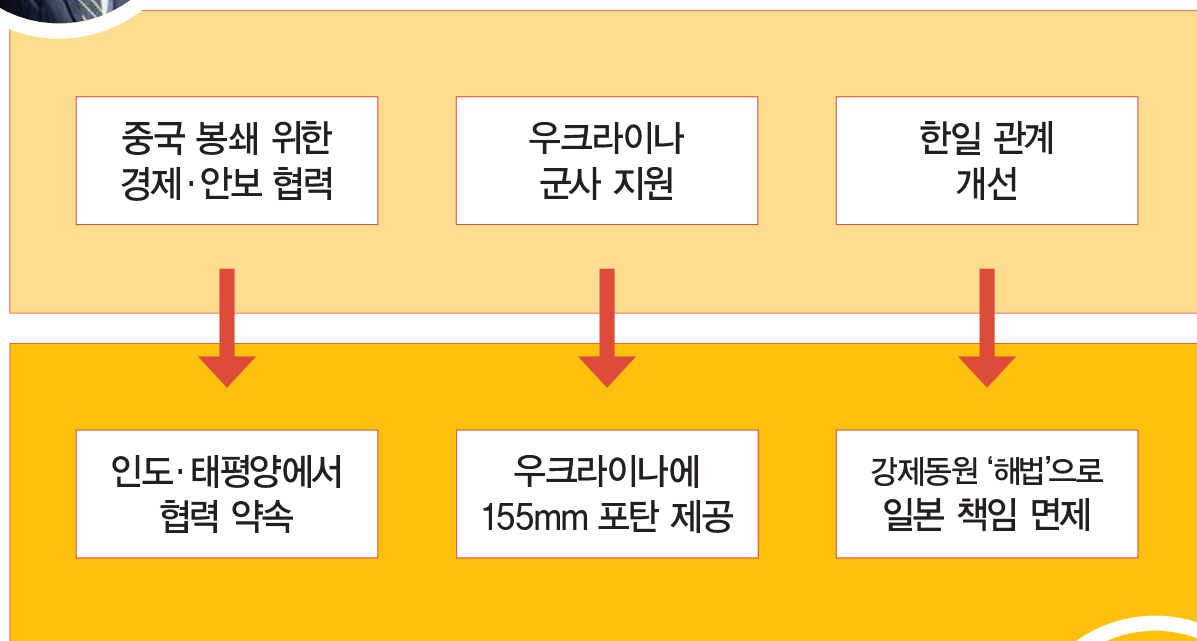
윤석열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대만 문제 등이 이런 문제에 해당한다. 그는 이 문제들에서 확고하게 미국 편을 표명한 뒤 미국으로 향했다.

이 인터뷰는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격앙된 반응을 불렀지만,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 정상은 전략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무기를 더 자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것도 중국의 반발을 샀다.

윤석열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친미 일변도이자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 폭주를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모순과 위험을 키우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



미국, 자국 패권 전략에 한국 동참 요구



미국의 요구에 응당한 윤석열



윤석열의 외교 1년

우선,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맥락 속에서 외교 정책을 펴 왔는지 돌아보자.

두루 알다시피,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문제다. 미국은 신흥 강자인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도전을 제압하려 한다. 반면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시도에 균열을 내려 한다.

이런 추세가 15년 넘게 발전하는 와중에 지난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을 결속시켜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게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강화에 공을 들여 왔다.

미국은 이와 같은 패권 유지 전략에 한국도 동참하기를 바라며 압박해 왔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을 요구했고, 미·일 동맹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일 관계 개선도 촉구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유지에 협력하는 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라고 한국 정치인들을 설득해 왔다. 그들 중 일부는 서방 강대국들의 모임인 G7에 한국을 추가해 G8으로 확대하자는 유인성 제안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쪽으로 확고하게 기우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유지되도록 협력하는 게 한국 자본주의에 더 이롭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아직 최선진국들은 따라잡지 못한 채 신흥국들의 추격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이고, 남·북한 대치로 안보 불안 정도 만만찮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전력 강화를 한미일 동맹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꼽는데, 이것은 단지 핑계가 아니다.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의 안보 공약이 더 중요해졌고, 윤석열은 미국으로부터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의 약속을 받아내고 싶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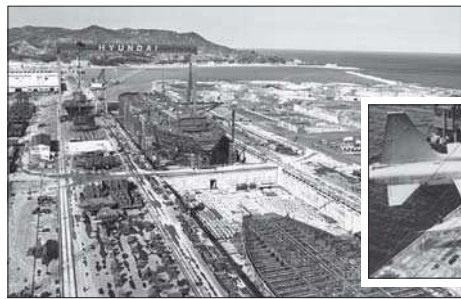
또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등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에 편승해 중

국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는 효과를 얻길 바란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에서 중국 기업들이 경쟁자로 떠올라 불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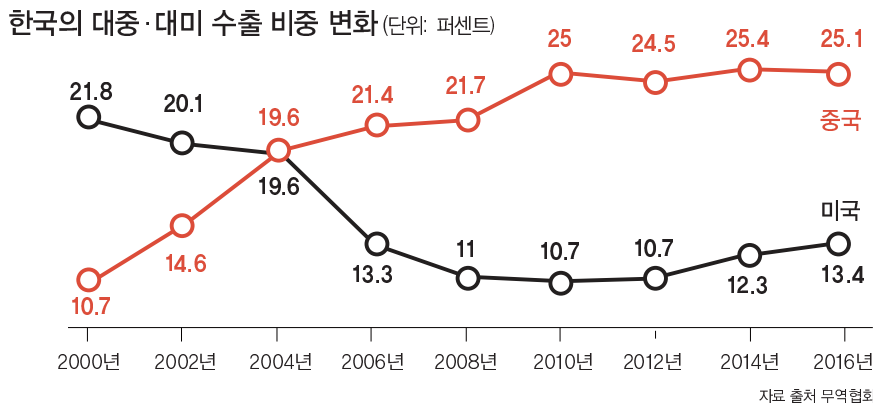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미국 오리지널과 똑같은 제목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발전시킬 의지를 보여 줬던 것이다. 미국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 “전체주의”를 비난하고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미국을 돕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결단한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이 바라 마지않던 일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이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어서 국내에서는 반감이 컸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의 “용기”를 거듭 칭찬했다.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재확인했다. 이는 5월 7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5월 21일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 미국의 후원 속에 수출 지향 공업 성장
▼ 미국이 공여해 준 F-5 전투기



윤석열의 외교가 처할 난맥상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공공연히 적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 쪽으로 확고히 기우는 도박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적 이익을 챙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외교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오늘날의 세계는 냉전 때와는 사뭇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대소련 전초기지인 한국에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과 밀착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 자신의 이해관계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2000년대 동안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경제적 관계를 맺으며 경제 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광활한 시장일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향한 생산의 주요 파트너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과 중국의 적대가 점점 첨예해지자 한국 지배계급의 고심은 깊어져 왔다. 한미동맹이 제공해 온 경제적·안보적 이익이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위기에 빠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보답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신규 투

자에 대한 규제를 부분 완화했다. 그러자 삼성 이재용과 SK 최태원은 즉시 중국으로 갔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한국 자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 중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한국 자본가들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게 반도체 보조금과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규제 문제에서 양보를 얻어 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경제 문제에서 빈손으로 왔다. 물론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디딤돌 삼아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지배계급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모순은 단순히 외교 수완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가 발전해 온 것의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냉전 시기와 달리 한국에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보장할 능력이 없다. 한국을 중국에서 떼어내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대체할 시장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실사 미국이 한국과 몇몇 주요국 경제를 중국에서 떼어내는 데 일부 성공한다 해도, 윤석열의 도박은 한국 지배계급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시도가 초래할 기존 공급망 교란과 세계 경제 불안정 증대는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

윤석열의 외교 정책은 평범한 한국민들에게 위협과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윤석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해 '확장억제' 강화를 공식화했다. 윤석열은 이것이 북핵 위험 앞에서 단행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확장억제란, 유사시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해 핵전력 운용 논의와 정보 공유를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핵협의의 실질성에 대해 감론을박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 핵무기가 한국에 더 빈번하고 정례적으로 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략 폭격기도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로 들이는 정책이 과연 평범한 한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까?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역효과를 낼 뿐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쿠바 카스트로 정부는 미국의 위협에 직면해, 소련과 동맹을 맺고 소련 핵미사일을 자국에 배치하는 데 동의했다. 쿠바 정부는 소련 핵무기가 미국에 대한 억지 수단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쿠바는 냉전의 최전선이 됐고, 핵전쟁 위기에 휘말렸다. 미국과 소련 양측이 막판에 한발 물러

서지 않았다면, 쿠바 국민은 물론이고 인류가 핵전쟁으로 공멸할 뻔했다.

쿠바 위기 같은 일이 오늘날 벌어지지 않는 않지만, '워싱턴 선언'은 주변국들을 자국해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는 비단 북한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국제 정치에서 핵무기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핵전력 격차를 줄이려고 핵탄두 규모를 늘리고 있다. 미국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오키나와 동맹 차원에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도 호주에 배치할 예정이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 배치를 위한 군 시설도 호주 북부에 건설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핵전력 전진 배치를 강화하는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한·미·일 3국 확장억제 협의체로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중국은 '워싱턴 선언'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다.

미국 핵무기의 한국 배치는 역내 군비 증강도 부추길 것이다. 그로 인해 노동자 등 서민층의 자세 부담이 커지고 복지가 희생될 공산이 크다.

한·미 양국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 제공"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문제다. "국력에 걸맞은 기여"로 "국제사회 내 위상"

▶ 10면으로 이어짐



2023년 2월 23일 부산 직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함

▶ 9면에서 이어짐

을 높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군사 지원은 앞으로 더 과감해질 수 있다.(윤석열 자신도 전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나토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장갑차 1550대, 전차 230대 외에 엄청난 양의 탄약을 보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이 군사 지원을 보태는 것은 전쟁이 격화되고 확대되는 데 일조할 뿐이다. 이미 1년 넘게 소모전이 진행되고, 핵전쟁의 공포도 너울거린다. 윤석열의 군사 지원은 이 전쟁이 예기치 못한 위기로 치닫게 일조할 뿐이고, 그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게다가 그 위기는 대만해협과 한반도 등 동아시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석열 외교에 대한 민주당과 좌파 측의 비판

이처럼 윤석열의 외교가 한반도와 주변의 불안정을 부추기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미국과 너무 밀착해 “국익”과 안보에 손해를 끼친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균형 외교”를 대안으로 추구해 왔다. 한미동맹을 우선하되 중국·러시아와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국이 적극적인 균형자 구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교수가 그런 인물이다.

적극적 균형자론은 중견국들의 협력을 모아 미·중 진영 대결이 아닌 새로운 다자 협력 질서를 만드는 데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남북 관계를 개선해 한미동맹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노선은 “미·중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전략”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위계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의 경쟁을 장기적으로 제어할 다자 협력은 가능하지 않다. 중견국들도 경쟁과 자본 축적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사적·경제적 경쟁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중간적 플레이어들이자.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한

두 제국주의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문정인 교수 자신도 한미동맹 유지는 기본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설정한 한미동맹의 성격·범위·과제 때문에 한미동맹이 다자 협력과 원만히 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는커녕 미·중 갈등이 악화될수록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좌파들도 미국으로 기운 윤석열의 외교를 비판하고 있다. “친일 굴욕외교,” “친미 조공외교”라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좌파의 일부는 한국이 더는 한미동맹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브라질이나 튀르키예처럼 동맹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을 추구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중국과 신흥국들 중심의 “호혜와 평등의 새 질서”로 교체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중국의 부상이 이런 질서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은 서로 다른 체제 간의 충돌이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 내의 경쟁이다. 중국에 기대를 거는 것은 기존 체제 내에서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 기대를 거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등 중국이 다른 국가와 맺는 관계를 보나, 노동자 착취로 경제를 성장시킨 방식을 보나 중국에 기대를 걸 이유는 없다.

제국주의에 균열을 낼 잠재력

오늘날 우리는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윤석열은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한국민들에게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미·중 제국주의 갈등의 한 축에 끼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들여오고,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평범한 한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세계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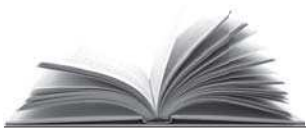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거나, 다자 협력 질서를 추구하거나, 중국 중심의 새 질서에 기대를 거는 것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진정한 대안은 제국주의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하는 제국주의 강대국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그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국주의 갈등의 한복판으로 달려드는 만큼, 노동자 투쟁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대한다면, 제국주의 자체에 도전하는 데서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서평 |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가족을 넘어서는 미래를 진지하게 열망하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을 폐지하라”니, 초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가정의 달’에도 생활고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아 “엄벌” 요구에 직면한 부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족은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자주 묘사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서해문집)는 자본주의와 가족의 상호 의존관계와 자본주의 가족제도의 독성을 폭로하고, “아래로부터 가족 폐지론”에 대한 다양한 사상과 운동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가족 둘 다 없는 세계를 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예세이다.

저자는 사회주의 사상, 페미니즘, 쿼어 이론을 수용해, 가족의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가능함을 피력한다. 자신의 사상을 가리켜 “마르크스주의적 트랜스 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먼저, 저자는 현재 가족제도가 전혀 자연스럽지도, 합리적이지 않음을 폭로한다.

“어린 사람들이 이런 보호자들[부모]에게 전적일 정도로 의존하는 건 가족의 도박임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본성에 따른” 현상으로, 심지어는 관련 있는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로 그려진다.

“심신이 완전 탈탈 털린 부모들의 지옥도가 끊임없이 언급되는데도, 부모라는 조건은 한없이 감상적인 취급만 받는다.”(17쪽)

또, 자본주의하에서 가족제도가 하는 구실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한편,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가족 안의 사람들을 숨막히게 죄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가족이 없으면 부르주아 국가도 없다. 가족의 기능은 복지를 대신 수행하고 채무자의 보증을 서는 것이다. ... 국가의 노동력 재생산을 저렴하게 관장하고 빚을 확실하게 갚게 하는 수단이다.”(19쪽)

“오늘날에 가족은 허울을 걷어내고 보면 국가와의 경제적 계약 또는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일 뿐이다.”(39쪽)

그럼에도 국가들이 추진하는 “긴축 정책은 의도하기라도 한 것처럼 프롤레타리아트의 자녀 출산을 뺏길 빠지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소피 루이스 지음, 성원 옮김,
서해문집, 184쪽, 14,800원

는 부담으로 만들고 있다. 가사노동은 성별화되고, 인종화되고, (부유한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서야) 임금도 못 받는다. 이런 전 지구적인 조건에서 술한 이들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13쪽)

숨겨진 역사

저자는 간략하지만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며, 현재의 가족제도가 인간의 본성이거나 영원불변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식민지 이전의 아메리카 선주민 전통도 그중 하나다.

“그들은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했고, 두 가지 이상의 젠더를 존중했으며, 성적 쾌락에 대해서는 느슨한 사회적 제한만 두었고, 때로는 (수유 같은) 모성 수행을 모든 젠더를 포괄하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행위로 개념화했다.”(78쪽)

저자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다소 의아하지만, 19세기 후반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선구적인 연구와 1970년대 엘리너 리콕 등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런 모습은 계급 이전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었다.(관련 기사: 본지 344호, [엥겔스 탄생 200주년] 엥겔스가 파헤친 여성 차별의 기원)

식민 통치자들은 사유재산과 일부일처제와 결혼 제도를 강요하며 선주민 사회의 평등주의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애를 썼다. 칼라일인디언산업학교(1879~1918)에 인디언 아이들을 수감시키고 “정착민 섹슈얼리티”를 주입시킨 것도 한 사례다.

저자가 소개하는 미국 노예들의 역사도 흥미롭다. 노예 제도는 흑인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흑인 노예들은 대안적인 ‘친족’ 구조를 형성했다.

해방 이후에도 이들은 “국가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해방노예들이 문란한 동거 생활을 하고, 일처 일부제의 관행 밖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결혼을 경악스러울 정도로 느슨하게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84쪽)

재건시대 미국 정부 역시 일부일처제와 법적 결혼을 의무화하고, 이에 벗어나는 흑인들을 기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언급하는 현실, 오늘날 국가와 우파가 나서서 난민들의 가족을 찢어발기는 동시에, 여성과 트랜스젠더의 신체적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모습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 외에도 저자는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조제프 푸리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러시아의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혁명적 페미니즘, 게이 해방 운동 등 여러 사상가와 운동을 다루며 “가족 폐지”의 이상을 그려 나간다.

전략의 부재

저자는 “폐지”를 뜻하는 독일어 Aufhebung를 언어학적으로 파고들며 그것이 변증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Aufhebung는 단지 없앤다는 의미뿐 아니라 보전과 연장의 의미도 있다.

그에 따라 “가족 폐지”에는 “가족 중심의 사회라는 거대한 비참함 속에 파묻힌, 이상적인 혈연관계에서 나타나는 해방적인 부분” 즉, “상호 돌봄, 상호 의존, 소속감”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 저자는 가족을 “동지적 관계”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대체하자고 말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이상에 공감한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자본주의와 가족의 숨 막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가족을 넘어서는 대안을 향한 진지한 열망을 보여 주지만, 저자가 이 중요한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은 이 질문에 노동계급의 혁명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자본주의에서 처한 객관적 위치 때문에 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평등주의적이고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이 있다. 그리

고 이런 근본적 변화 속에서 (현재와 같은) 가족 제도가 사멸할 물질적 토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저자와는 달리 “가족의 폐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 각종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대중의 필요에 기초해 운영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이런 가능성을 얼핏 보여 줬다. 노동계급이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뒤엎었을 때, 비로소 가족에게 떠넘겨져 있던 양육과 돌봄을 대규모로 사회화할 가능성이 생겨났고 성적 자유가 폭넓게 보장됐다. 저자가 우호적으로 다룬 콜론타이 역시 이런 역사의 선두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얼마 못 가 좌절을 겪게 된 것은, 저자가 얼핏 암시하는 것처럼 “대단히 형편없는 당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 혁명의 고립과 반혁명 때문이었다. 노동계급 혁명의 숨이 죄이고 마침내 끊어졌을 때 이제 막 첫발을 댄, 가족을 넘어서는 사회에 대한 진지하고 실현 가능한 실험도 시궁창에 처박혔다.

노동계급 투쟁과 혁명이라는 대안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가족 폐지”의 이상은 아무리 대담하더라도 (대대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기껏해야 소규모 사람들의 공동체적 실험에 그치고 말 것이다.

가족을 떠나면 더 열악한 복지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청소년들, 나이 들거나 장애를 얻어 더는 돈을 벌지 못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무정한 세계에서 (비록 매일같이 좌절하더라도) 마음의 안식처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서 가족 외에 주어진 선택지가 얼마나 될까?

이런 사람들에게 “혈연 중심의 사고와 관행과 언어를 헐겁게 하고, 몰아내고, 털어버리려는 우리 모두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하는 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전략의 부재 때문에 저자는 공허하면서도 때로 엘리트주의적인 의식 변화 추구에 그치는 것이다.

자본주의 폐지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계급 혁명의 전망을 가져야만 “가족 폐지”의 이상도 진정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샌더스 등, 바이든 재선 출마 지지 미국 좌파의 앞길은 어디로?

또다시 트럼프와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듯하다.

지독한 기시감 속에서 미국인들은 극우의 기수냐, 아니면 기업주들이 후원하는 제국주의 전범이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또 놓이게 생겼다.

트럼프를 물리칠 방법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확고한 층이 민주당 주변에 형성돼 있다.

2020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바이든과 경합했던 버니 샌더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대신 샌더스는 바이든 재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히며 가장 앞장 서서 바이든 지지를 표명했다.

미네소타주(州) 민주당 하원의원 일한 오마도 바이든 재선 출마를 지지했다.

오마는 2018년 커다란 찬사를 받으며 급부상한 민주당 내 “진보”파 하원의원 모임인 일명 “스쿼드”의 일원이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만이 트럼프와 공화당, 성장하는 극우에 맞서 승리할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바이든도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런 주장을 한다.

바이든 선거운동본부가 제작한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다. 트럼프와 극우 세력들을 꺾을 힘은 오직 바이든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그 영상은 2021년 1월 극우의 국회 의사당 습격 장면으로 시작한다. 뒤이어 바이든이 이렇게 말한다. “자유, 개인의 자유는 우리의 근본입니다.”

배신

트럼프나 다른 인종차별적 공화당 정치인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극우는 실제로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이 4년 더 집권하는 것도 승리라고 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의 행적을 보라. 바이든은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처음 제시한 액수의 극히 일부만이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에 할애됐다.(관련 기사: 본지 391호 ‘바이든, 재정지출·기후 공약 저버리다’)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을 자처했다. 그러나 지난해 그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저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 파업이 “크리스마스의 재앙”이 됐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바이든으로 극우를 꺾자고? 바이든의 변화 염원 배신이 환멸을 낳아 트럼프가 재기할 수 있었다

바이든은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윌로우 프로젝트’ 등 새로운 화석 연료 개발 사업을 승인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이든은 전쟁과 제국주의에 한결같이 매진해 왔다.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물주로, 이제까지 750억 달러어치의 무기와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데서 나토 내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진정한 적수인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지난 행적에 비춰 보면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지지가 딱히 높지 않은 것이 그다지 놀랍지 않다.

취임 당시 바이든의 지지율은 53퍼센트였는데, 이것도 신임 대통령치고는 낮은 것이었다.

지난달 바이든의 지지율은 42퍼센트에 불과했다. 바이든이 우파를 꺾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바이든이 2020년에는 트럼프를 꺾었는지 몰라도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이든은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찍어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트럼프에게 승리를 내줄 수도 있다.

공화당의 선거 성적은 2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였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을 탈환했다.

민주당이 더 큰 패배를 면했던 것은, 임신중지권을 일부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연방대법원의 대항마로 비쳤던 덕분이다.

하지만 그 판결이 폐기된 후 바이든이 임신중지권 보호를 위해 한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바이든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를 개선하는 계획을 시행하지 않아 공화당이 지지를 다시 끌어모을 기회를 얻었다.

민주당 좌파의 성원들과 샌더스 같은 인물들이 바이든의 재선을 순순히 지지하는 것은 이들이 여전히 민주당 기구의 포로가 돼 있음을 보여 준다.

바이든 취임 이후 민주당 진보파는 자신의 거취를 두고 괴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스쿼드” 소속 의원들의 행보가 이를 가장 뚜렷이 보여 준다. “스쿼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일한 오마, 아야나 프레슬리, 라시다 툴라임의 모임으로 시작돼, 트럼프 임기 동안 기세를 높였다.

“스쿼드”는 의회 내에서 비교적 급진

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좌파가 의회적 노선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자아냈다.

그러나 바이든이 집권하자 “스쿼드”는 민주당의 노선을 추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 노선이 바이든을 뒷받침하기 위해 좌파로서의 신망을 잃고, 변화 열망을 안고 민주당에 헌신한 사람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것인데도 말이다.

아이언돔

2021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 ‘아이언돔’에 대한 재정 지원 증액을 승인하는 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해 “스쿼드”에서 이탈했다. 그의 해명은 기권표를 던지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본지 386호 ‘미국 좌파 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 왜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반대표 안 던졌냐’)

또, 툴라임을 제외한 “스쿼드” 성원 모두가 2022년 철도 노동자 파업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찬성 투표했다.

우파에 타협하는 것은 특히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됐다.

그 덕에 그녀는 민주당 지도부에 더 가깝게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사진 출처: omahouse.gov

좌파 자처한 “스쿼드”의 바이든 지지는 민주당이 “운동들의 무덤”임을 재확인시킨다



사진 출처: Becker(1998)(물라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등 거리 운동과 일터의 투쟁에 좌파의 길이 있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좌파에게 제시 되는 선택지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그들은 계속 행동을 촉구하며 당 지도부와 대결할 수도 있고, 지도부와 타협하고 협력할 수도 있다.

미국 민주사회당(이하 DSA) 같은 단체들은 “진보적” 후보들을 당선시키려는 노력에 영향을 미쳐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대부분의 DSA 활동가들은,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해도 민주당은 정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민주당 바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DSA는 샌더스의 2016년 대선 후

보 경선 선거운동의 핵심에 있었으며, 2020년에도 샌더스를 지지했다.

DSA 몇몇 지부들은 바이든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것에 반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그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아이다호주의 DSA 보이시 지부와 DSA의 내의 ‘붉은 노동자 코커스’ 분파는 민주당과의 “깨끗한 결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결의문은 좌파 후보들을 공식 정치에 진출시키는 데 힘을 쏟는 DSA의 노선에 의문을 제기했다.

“DSA가 지지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은 노동계급에 대한 DSA의 책무를 대표하는 데에 거듭 실패해 왔다.”

그 결의문은 DSA가 민주당과 그 당의 후보들과 “깨끗이, 명명백백하게, 돌이킬 수 없이 결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촉구는 독립적 노동자 정당 결성에 나선다는 내용을 결정문에서 모두 삭제한 2021년 DSA 당대회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나 깨끗한 결별은 필요한 일이다.

“깨끗한 결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활동가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 좌파적 민주당 후보를 주류 정치의 중심부로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시간을 일터에서 투쟁을 건설하고, 거리 운동을 건설하고, 심지어 대안 정당을 건설하는 데에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열정과 에너지는 자본가 정당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결과는 언제나 막다른 골목이었다.

민주당이 “운동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바이든을 지지하느라, 진정한 변화의 전망을 열 운동들을 민주당에 갖다 바치는 것은 그 운동들을 고분고분하게 길들이는 효과를 낸다.

그런 노선은 운동들을 의회적 해법으로 기울게 만들고, 그런 해법은 운동이 체제를 수호하는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게 만든다.

민주당에 투신한 좌파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의 당내 출셋길과 자신이 출마하면서 복무하려 했던 대의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DSA와 미국 좌파는 민주당에게서 독립적인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결별해서 건설할 조직이 어떤 것이냐를 두고도 논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노동계급 대중의 염원을 더 잘 반영할 후보들을 세우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과 동맹을 맺을 수 있고, 대기업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지향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조직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오른쪽으로 견인하는 논리와 제대로 단절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신생 조직이 선거와 의회 정치를 중심으로 조직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핵심 목표는 주류 정치 바깥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집중하는 혁명적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사회의 분노와 울분이 커져이 쌓여 왔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파업과 일터에서의 투쟁이 늘어난 것이 보여 주는 바다.

좌파는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이런 투쟁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이 운동들의 일부를 민주당 쪽으로 끌어당기는 견인력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미국 거리 운동의 규모와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 노동계급 사람들이 또다시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할 때다.

소피 스콰이어 / 번역 김준호

출처 Sophie Squire, “Where next now for the US left?”, (2023. 4. 30)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 독일 탈핵으로 세계는 안전해지고 있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 IAEA도, 한일 양자 ‘검증’도 믿을 게 못 된다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

이현주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놔다. 정부는 정순신 사태에 대한 공분이 일자, 부랴부랴 자기들도 학교폭력 근절에 진심이라는 듯이 대책을 내놓았다.

주된 내용은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고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과 트라우마를 안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폭력 처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교육이어야지, 가해 학생에 대한 응징이 목적이 돼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사안을 가리지 않고 가해 학생을 응징하고 낙인찍는 데 초점이 있다. 가령 많은 교사들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에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는 현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을 하던 시절에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학교폭력은 줄지 않았고,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행정 소송이 크게 늘었다. 애초에 소송을 걸 수 있는 부모도 소수이지만, 법률 싸움으로 갈수록 결국 정순신처럼 돈 있고 권력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는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를 내세우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연장하고(3일에서 7일로), 분리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요청시 학교장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 정지도 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러나 사안의 실체와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분리를 강제하고 그것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억울한 이를 만들어내거나, 사안에 비해 과장된 낙인 효과만 키울 확률이 높다. 그럴수록 교육적 해결은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키며, 사소한 폭력을 더 큰 폭력과 증오로 키울 뿐이다.

처벌이 엄하고 명확한 반면,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의료·법률 지원 방안은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제시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학교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회복적 정의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엄벌주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아상과 가치관의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은 단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억압과 폭력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게다가 입시 경쟁과 미래 불안 등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인 소외와 억압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관련 기사: 본지 455호, ‘학교폭력을 키우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소외’)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경쟁과 이기심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배우며 자라난다. 더구나 치열한 입시 경쟁 하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잠재력을 무시당한 채 좌절과 패배를 경험하고 열패감과 순응을 학습한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사망 요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런 억압과 소외 때문에 학생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왜곡된다. 정서적 혼란과 모순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을 쥐고 흔드는 것으로 거짓된 자존감을 얻으려 하고, 또는 만만한 대상에 대한 폭력으로 분노를 표출하곤 한다.

같은 조건에 처한 모든 학생이 폭력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건을 빼놓고 청소년 개인들의 빼놓아진 행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에 오히려 처벌 강화로 대처하는 것은 이 문제를

질 나쁜 개인들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저 가해 학생 개인들을 발견 즉시 분리하고 배제하고 응징하면 된다는 논리로 정부는 또한 축법소년 명령 하향도 추진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법질서’ 정책의 귀결이다. 윤석열의 ‘법질서’ 정책은 기존 질서 수호를 위한 대중 통제의 수단일 뿐이다.

응징에만 초점을 둔 접근법은 학교폭력 문제의 사회적 근원을 은폐하고, 대체로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사실 윤석열은 한편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 경쟁 강화와 긴축 등 학교폭력의 뿌리인 소외와 억압을 더 심화시킬 개악들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침체로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교육 경쟁 강화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정당화하고 경제적 곤궁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응보적이기보다는 회복적 정의에 따른 접근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을 더 조장할 정부의 교육개악 시도에 맞서야 한다.

무엇보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교육 외 업무 감축, 상담교사 증원 등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중적 투쟁을 통해 불평등과 입시 경쟁 자체에 맞서야 한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paper.org

노동자 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연월일 (주)레프트미디어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9

유럽 전역에 폭독한 긴축 준비하는 유럽연합

유럽연합 지도부가 일련의 새로운 긴축을 회원국들에 강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십조 원어치의 긴축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4월 26일 유럽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완화했던 [재정] 지출의 고삐를 다시 쥘 것을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속으로 각 회원국에서 온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

‘안정성장협약’으로 알려진 이 규약은 유럽 대륙 전체에 신자유주의를 강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이 규약은 각국 정부를 규제의 철창에 가둔다. 동시에 그들에게 긴축의 명분도 제공한다.

[그 규약에 따라] 유럽연합은 각국이 세금과 기타 수입으로 거둔 돈 대비 3퍼센트만을 초과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국가 누적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를 결코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한다.

유럽연합은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각국 정부가 은행, 기업, 그리고 자본주의 전반을 떠받칠 수 있도록 이 규약 적용을 잠시 유예했다.

이 규약 유예가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재정 적자가 3퍼센트를 넘는 모든 회원국은 내년부터 1년에 GDP의 0.5퍼센트 이상의 긴축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건과 교육 지출의 대폭 삭감을 포함한다.

3퍼센트 넘는 적자를 가지고 있는 국



유럽연합은 노동자의 적 팬데믹 기간에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재정 적자 확대를 허용했던 유럽연합이 그 대가를 평범한 대중에게 떠넘기려 한다

가는 열 곳이다(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등). 이 국가들은 규약을 무시하거나, 긴축을 시작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들은 4년에 걸친 긴축안을 유럽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개혁”(평범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을 함께 시행한다면 그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 긴축 계획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뒤따라야 한다. 영국노총 같은 단체들이 소속된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사무총장 에스더 린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긴축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증가했다. 다시 말해, 더 적은 일자리, 더 낮은 임금, 공공서비스 축소, 빈곤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계획을 놓고 각국 정부 간 의견 차이도 불거지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이 계획이 긴축을 충분할 정도로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가장 큰 경제 강국의 대표로서 린드너는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확실하게 긴축을 채택하기를 바란다.

프랑스 정부 대표들은 유럽위원회의 예산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표들은 반란을 벌이고 있

는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그런 긴축을 집행하는 것을 불안해 한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는 이 계획을 “다시 고쳐야 하고” 자신은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적자·부채 감축 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유럽연합의 긴축안이든 각국 정부의 긴축안이든 모두 중단시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유럽위원회의 계획은 유럽연합이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찰리 킴버 / 번역 김재현

출처 Charlie Kimber, “EU plans brutal austerity across Europe”, (2023. 4. 27)

▶ 16면에서 이어짐

윤석열은 고인이 분신한 당일에도 “노사 법치주의 확립” 운운하는 험박을 노동절 메시지랍시고 발표했고, 여당은 노조의 채용 요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석현수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장을 구속했다. 5월 3일에도 경찰은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용인수원지대 사무실과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초상집에 사죄와 조문이 아니라 경찰을 보낸 것이다.

사망 당일 긴급히 개최된 용산 대통령실 앞 추모 촛불 문화제에서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공표했

다.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사무국장은 “건설노조 중앙이 결정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투쟁”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발언했다.

계속되는 구속과 압수수색

건설노조는 5월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00여 명이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당일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파렴치범으로 몬 윤석열 정권이 양화동 동지를 죽였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5월 10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5월 17일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건설노조와 함께 5월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장례식장 앞에서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를 연다.

“장례식장에 오면서 (가족끼리) ‘적어도 우리가 물려서진 말자, 앞으로 갈 수 없겠으나 뒤로 물려서진 말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건설노조는 5월 16~17일 이틀간 전 조합원 상경 파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몸을 불사르며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려 달라”고 호소한 고인의 뜻을 기리고, 건설노조 공격과 노동개약에 맞서려면 (7월이 아니라) 즉각 파업 같은 집단적·대규모 저항이 필요하다.

진보 정당들도 원내 대응에 머물지

말고 장외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고인의 사망 책임은 건설노조 탄압과 노동개약을 진두지휘한 윤석열에게 있다. 서민층의 삶이 악화되면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중에 호전적인 친미·친일 외교가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우리 편 분노는 커지고 있고, 윤석열은 위기를 겪고 있다.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노동자 분신 사망 후에도 건설노조 조합원 구속과 압수수색을 벌이는 데서 보듯, 윤석열이 자리를 지키는 한 노동자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고인을 추모하는 길이다.

신정환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의 유언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 갔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허망하게 가족과 동지를 잃은 유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5월 1일 세계 노동절 아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분신한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 건설지부 3지대장이 다음 날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속죄양 삼기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고인은 정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치졸한 공갈범 취급하는 모욕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자신의 몸에 불을 댕겼다.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분신 전 고인이 노조 SNS에 올린 유서)

“먹고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사독재 정치에 제물이 되어 ...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고 ...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야 4당 대표들 앞으로 남긴 유서)

고인은 노동조합 동료들에게도 절절한 호소를 남겼다.

“꼭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 시



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고인을 추모하는 길이다

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세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건설노조에 대한 “200일 전쟁”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탄압한 정부는 곧바로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았다.

뒤이어 정부는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쟁의권 제약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윤석열 정부는 “법과 질서”를 앞세워 건설노조 등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가

고 있다. 노동자 투쟁을 고립·위축시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에 대한 저항을 약화하려는 책략이다.

속죄양

윤석열은 앞장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비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지껄였다.

경찰은 1계급 특진을 내걸고 마구잡이 수사를 벌였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했고, 16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10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올해 특진 예정 인원 510명 중 50명을 건설노조 단속 수사 분야에 배정했다(전세 사기 30명, 보이스 피싱 25명).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명째 자살하는 동안 건설노조 탄압에 더 힘을 실은 것이다.

고인도 3월 9일 지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며 ‘피의자’가 됐고, 이후 경찰 수사에 시달림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가 문제삼는 “[노동자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는 건설노조가 공사 현장 점거, 작업 거부, 출입 통제 등 정당한 저항 수단들과 이를 통해 쟁취한 성과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경기에 들어간 건설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려고 노조를 탄압하고 투쟁 수단들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격과 비난에 맞서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저항해 왔다.

조합원 4만여 명이 2월 28일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 도심에 모여 대정부 항의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분산돼 열린 노동절 집회들에도 합쳐서 수만 명이 참가했다.

고인 사망 후 윤석열 정부는 탄압 중단을커녕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고 해 사람들을 더 열 받게 했다. 죄 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는 책임 인정은커녕 죽지는 말라고 훈계한 것이다.

윤석열은 노동개악도, 건설노조 탄압도 중단할 생각이 없다.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0강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

일시 | 5월 17일(수) 오후 8시

발제 |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0517-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